

이슈브리프 842호
(2026. 5.17)

2026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양자 관계의 구조적 재편인가, 임시 봉합의 연장인가?

제842호

최용환 yonghwan@inss.re.kr
김윤희 yunheekim@inss.re.kr
박병광 bkpark@inss.re.kr
이상근 sang1617@inss.re.kr
장세호 sohill@inss.re.kr
홍건식 hks21c@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5월 14~15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구조적 경쟁 관계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치명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의 재정비에 주력한 위험 관리형 회담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글은 이번 회담을 △양자관계의 재설정 △대만 문제 △경제 협력 △중동 전쟁 △한반도 문제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미중 간 잠정적 안정기를 전략적 자율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대만 문제와 관련한 안보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등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안보 관점에서 협력 대상의 다변화와 기술 자립, 미중 주도의 AI 안전 논의 본격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동 문제가 미중 간 상시적 협상 의자이자 경쟁 변수로 남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외교, 안보, 해양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계가 2026년 가을 이후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바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스몰딜

2026년 5월 14~15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5분간의 본회담에서 복잡한 양자·국제 현안에 대한 접점과 상호 협력을 모색했다. 특히 두 정상은 중난하이 정원과 천단 공원 산책과 차담을 통해 상호 간의 친밀함과 최고위급 간 소통의 건재·효용을 시각화했다. 하지만 별도의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의 부재에서 나타나듯, 이번 회담은 구조적 경쟁 관계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치명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의 재정비에 주력한 위험 관리형 회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양측은 상호 간 핵심 이익과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를 재확인하고, 일부 영역에서의 스몰딜을 통해 ‘공존’과 ‘안정’을 도모했다. 이에 본 글은 이번 회담을 △양자관계의 재설정 △대만 문제 △경제 협력 △중동 전쟁 △한반도 문제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중 관계의 재설정?: ‘전략적 안정 관계’를 둘러싼 동상이몽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미중 사이의 새로운 양자 관계 담론의 등장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의 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극복하고 세계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양자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통·협력의 강화와 차이점의 적절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그는 위의 따듯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자회견 등에서 소위 ‘전략적 안정’ 담론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에 대한 수사와 접근법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대칭성을 보여주며, 이번 회담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안정’ 담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포석이었다. 이 같은 행보는 새로운 관계 담론의 제시를 통해 양자 관계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3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도 안정과 공존에 방점을 둔 중장기적 양자 관계의 틀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짠 관계의 틀에 갇히지 않고 거래에 집중하며 행동의 자유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유지코자 했다.

즉, 우리는 현 시기 미중이 양자 관계에서 추구하는 이익과 시간의 지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자 관계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구축하고, 그 전제 조건이자 레드라인으로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코자 했다. 반면, 미국은 경제적 이익과 중동 전쟁과 같은 특정 안보 현안에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모두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8년 4연임을 앞두고 전술적 시간별기가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임박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과 경제적 이익이 절실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획득해 4연임의 정당성 획득을 요했던 것 같다.

대만 문제: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사안으로 남겨진 의제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첨예한 순간을 만듦과 동시에,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남긴 의제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 사안을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명시하고, “대만 독립과 해협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선언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기 판매 원칙의 훼손이 그 첫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귀국길 기내에서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약속한 ‘6대 보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일축했다. 44년간 유지해온 대만 안보의 핵심 안전장치를 스스로 흔든 것이다. 둘째는 대만 방어 의지의 모호화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 관련 물음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대만 방어 의지를 누차 밝혔던 것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다. 동시에 이런 모습은 중동 전쟁에서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돈로주의’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상했던 대로 미중 간에 ‘관리된 모호성’은 유지됐다. 그러나 그 모호성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 더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심각한 전략적 함의다.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 프레임은 미중 경쟁을 관리 가능한 틀 안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안정이라는 단어에는 불편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누구의 안정인가, 어떤 비용으로 유지되는 안정인가, 그리고 그 안정의 바깥에 놓인 국가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안정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의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안정은 무역 성과, 국내 정치 부담 완화에 가깝다. 같은 단어 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내장되어 있으며, 그 간극이 이번 합의의 근본적 취약성이다.

이번 회담의 대만 관련 결과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6대 보장’ 경시 발언과 무기 판매 보류 가능성은 대만의 불안을 키우며,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성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중동 전쟁 수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자산 일부를 이미 중동으로 전용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 먼 곳에서의 전쟁’을 꺼린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 이는 역내 동맹국 모두에 미국 안보 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대케 하는 요인이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 시진핑의 모험주의를 단념시킬지, 오히려 더 대담하게 만들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 불확실성의 비용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키운다.

미중 무역·투자 합의와 AI 협력: 스몰딜 속 가지적 성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고조된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속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도출했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양국 모두에게 좋은,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200대 규모(최대 750대까지 확대 가능) 구매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두 2,500만 톤의 수입 이행을 재확인하고, 미국산 원유·LNG 등 에너지와 추가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무역을 총괄할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를 감독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안전 협력이다. 양국은 AI 기술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안전장치 구축에 합의했다. 최근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Mythos)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I’로 평가받는 가운데, 해킹 시도와 무단 접근이 확인되면서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해커 집단이나 특정 세력이 최첨단 AI를 활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군비경쟁 양상으로 치닫던 AI 분야에 안전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미국이 중국 주요 기술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 H200 AI 칩 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국의 수출 조건, 중국의 자국 기술 보호 규제, 그리고 미국 내 강경파 반발 등으로 실제 거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단기적 경제 이익을, 중국은 중장기적 시간별기 차원의 상호 윈윈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실질적인 구매 약속과 감독 위원회 설립으로 성과를 챙겼으며, 중국은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기술 자율화와 산업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

중동 문제: 미중 공감대 확인, 그러나 협력·경쟁의 병행 불가피

이번 회담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동 사태의 즉각적 해결보다는 역내 군사적 긴장과 해상교통 차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됐다. 양측이 확인한 공통 인식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감대는 아직 원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군사·외교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갈린다.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은 이란의 주요 전략 파트너이자 중동 안보 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란의 행동에 보다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 겹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해졌고 그만큼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도 커졌다. 군사 개입을 늘리지 않은 채 이란을 억제해야 하는 이중 과제 속에서 미국은 정보 공유와 외교적 조율 등을 통해 중국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여지를 타진하는 전술적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에서의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란 및 걸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자임을 내세우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강한 압박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4연임을 앞둔 지도부의 정치적 과제 아래 중동 현안에서의 협조를 대만 문제나 대중 제재 완화 등과 연계하려는 계산도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중동 위기관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위자이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는다. 이란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 역내 동맹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동 안보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논의는 미중 이해관계가 단기적 위기관리와 장기적 영향력 경쟁이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로 중동이 미중 관계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장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의제 상정 의미 크나 단기적 성과 기대 난망

이번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도 다뤄졌다. 트럼프가 전쟁 중에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과 대만, 무역, 첨단기술 등 첨예한 사안들에 관해 협상하면서, 중동, 우크라이나

분쟁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논의 내용을 파악하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을 고려할 때, 두 정상에 북미 대화 재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측이 왕 부장을 통해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핵화를 포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며 상당히 조용하다고 언급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트럼프가 미국을 존중하며 조용히 지내는 듯 보이는 김정은을 상대로 대화를 서두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의 직접적 계기는 되지 못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 증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방중 한 달 전에 왕이가 김정은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 늘 이야기해 온 “전략적 소통”이 오랜만에 실제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입장이 트럼프에게 전달됐다면 중국이 북미 사이의 메신저 역할까지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미를 앞두고도 중국 고위 인사의 방북이나 북한 고위 인사의 방중이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가 북중 정상급 회동 등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중국의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의 지속성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곧바로 이어질 양자·다자 차원의 정상회담 등을 국제관계 재편의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이 이어진다. 미중 정상회담에 뒤이은 중러/중파 정상회담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중/중러 정상회담의 연쇄 개최를 통해 현재 국제질서를 뒤흔든 유럽과 중동의 전쟁을 일으킨 국가 정상들이 차례로 베이징을 방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는 중국이 신 강대국 협조체제의 체스판을 주도하는 의도적 연출로도 평가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분명치 않지만,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중재자로서 베이징의 역할에 대해 한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은 한 두 번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경쟁 관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경쟁의 양상과 궤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미중 관계가 ‘전술적 데탕트’ 혹은 ‘관리된 경쟁’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갈등이 일시 봉합됐지만, 특정 계기로 언제든지 일방의 결정에 의해 경쟁·대립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현 시기 조성된 미중 간 잠정적 안정기를 기회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두 국가 간 가드레일의 파손·붕괴 상황의 도래를 고려해 전략적 자율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대만 관련 미중 간 논의는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만과의 약속을 사실상 재해석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를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거리 전쟁 개입을 꺼린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 의지에 의문부호를 만들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대만 관련 핵심이익을 존중할 경우 미중 관계가 안정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한국의 입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안보정세의 상대적 안정기를 활용해 전시작전권 전환 등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적 호재가 기대되지만, 반도체·AI·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협력 대상의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양국 간 AI 안전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정부는 양국의 AI 안전 규범 구축 과정이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미중 간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경쟁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투자 위원회’ 운영 상황과 9월로 예정된 미중 후속 회담 결과를 면밀히 추적·관찰하면서,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와 중국 시장 리스크 관리의 두 과제가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한다.

다섯째,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동 사안이 향후에도 미중 관계의 부수적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의제이자 경쟁 변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에너지 수송, 해상 교통로 안정, 역외 전력 배분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외교안보 정책과 해상 교통로 및 에너지 안보 대응을 분리해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연계된 원유 수송 차질, 유사시 미중 군사 활동 확대,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 재배치 움직임은 서로 맞물려 전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외교, 안보, 그리고 해양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계가 2026년 가을 이후로 옮겨짐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9월 시진핑의 미국 답방과 APEC/G20 정상회의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집중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으나 핵심 의제로 다루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2026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각자도생의 강대국 경쟁 시대에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관련 의제를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견고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북미 간 메신저 역할 가능성이 확대된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